

# 12대 전남도의회 '이해충돌' 오명 떨쳐낼까

행동강령 조례 무시 고질적 병폐  
신고 등 전무 제 식구 감싸기 전형  
부동산 의혹 휩싸인 최무경 의원  
민주 공천 이어 부의장까지 입질

서면으로 미리 신고하고 관련 활동을 회피하도록 규정했다.

또 해당 조례를 위반한 경우 누구든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했고,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임기가 끝나고 다시 의원에 당선된 경우에도 조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하지만 이 같은 조례에도 불구하고, 도의원들의 이해충돌 시비는 잇을만 하면 불거지고 있고 관련 논란에 대한 자체 징계는커녕 신고조차 이뤄지지 않으면서 제 식구 감싸기 등 지역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아왔다.

실제 11대 의회가 끝나는 이달 말까지 임기가 이어진 한근석 의원(민주·비례)은 배우자가 원아가 300여명인 전남 최대 규모의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도, 소관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며 예산안 심사까지 참여해 논란이 일었다.

6·1지방선거 사전시장을 출마를 위해 의원직

을 사퇴한 오하근 전 의원(민주)도 부인이 병상 380여개로 전남에서 7번째로 큰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지만, 관련 상임위에서 예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를 펼쳤다.

11대 의회 후반기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인 최무경 의원(민주·여수4)의 이해충돌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다.

최 의원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여자만 명품관광지개발 공약을 발표하고 당선된 이후 이듬해 본인 이름으로 여수시 소라면 일대 바다 조망 토지 2만여㎡를, 2021년에 배우자 명의로 350여평을 추가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2023년 6월 완공을 목표로 18억원의 전남 도비가 투입돼 토지 인근에 2차선 도로 385m 신설하고 140m 상당의 1차로 구간을 2차로로 확장하는 도로 개선 공사가 추진되면서 논란이 휩싸였다. 도로가 완공되면 여수에서 순천으로 향하는 도로에서 최 의원의 토지와 연

결된 해안로에 직선으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조성되고, 기존보다 거리가 짧아지게 된다. 도로 폭 개선도 기대되면서 최 의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 및 공직자 이해충돌 의혹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착공이 이뤄졌고 도의회 상임위원장이 상임위 소관부서 예산으로 본인 소유 토지로 진입하기 쉽도록 지방도와 연계해 도로 선형 변경과 차로 확장을 진행한 것으로 해석되면서 파장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에 최 의원은 지방선거를 목전에 둔 지난 4월 여수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 해결을 위해 도의회 상임위원장으로서 전남도 도로관리사업소에 건의해 추진한 것이라고 반박한 상황이다.

이처럼 11대 의회만 보더라도 이해충돌 회피를 규정한 조례를 무시한 행태가 잇따랐지만

자체 징계 내지 신고는 사실상 전무해 도의회 의 제 식구 감싸기의 전형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그나마 민주당 전남도당이 한근석 의원에 대해 당원권 1개월 정지를 내린 게 전부다. 같은 논란이 있는 오하근 의원은 엄중 경고에 그쳤고, 최무경 의원은 지방선거 당시 해당 지역구 최대 이슈였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최 의원은 논란과 의혹에도 불구하고 당내 경선과 본선을 거쳐 12대 의회 전반기 부의장을 위해 동료 의원들의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

이와 관련, 12대 의회 전반기 의장에 출사표를 던진 서동욱 의원(민주·순천4)은 "도원스스로가 논란의 소지가 있는 상임위를 회피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해충돌방지법이 강화된 만큼 개정된 조례가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의회를 이끌어 가겠다"고 말했다.

역시 전반기 의장에 도전장을 내민 김성일 의원(민주·해남1)은 "이해충돌 논란은 의회의 위상과 의원 본연의 역할을 위축되게 하는 만큼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해당 의원의 상임위원 배제 등 달린 전남도의회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근산 기자

다음 달 개원을 앞둔 12대 전남도의회가 고질적 병폐 중 하나인 '이해충돌'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3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지난 2019년 11월 직무 범위 등 도의원들이 준수해야 할 '의회 행동강령 조례'를 개정했다.

개정 조례안은 본인이나 4촌이내 친족, 의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재직중인 법인·단체 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의장 및 상임위원회장에



광주 서구 인수위 출범 민선8기 광주 서구청장(당선자 김이강)직 인수위원회가 13일 서구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에 마련된 인수위 사무실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서구청장직인수위 제공

## 지하철 2호선 지중선로 매설 도로굴착 시행

시, 20일부터 착수

광주시 도시철도건설본부는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한전 인입 수전선로 공사를 위해 오는 20일부터 대남대로 농성교차로에서 백운광장까지 총 연장 2,564m에 대한 도로굴착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공사는 도시철도 2호선에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단독 선로로, 한전 화정변전소부터 도시철도 정거장 변전실까지 전력케이블을 지하로 매설한다.

도시철도2호선 전력공급을 위한 지중선로 매설은 총 3개 공구로 시행되며, 현재 1공구와 3공구는 지난해 12월에 굴착을 완료했다.

2공구 대남대로 도로굴착 구간은 한전 화정변전소부터 농성교차로, 건강관리협회, 동아병원을 거쳐 남구청 앞 211정거장까지 폭 1.4m, 깊이 1.4m, 연장 2,564m다.

시 도시철도건설본부는 공사현장에 차량 유도 안내표지판, 공사 안내 현수막, 각종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하고 안내요원을 배치할 예정이다. /오선우 기자

## 정기 브리핑

### 서삼석, 쌀 가격안정 근본대책 마련 촉구

가격폭락 사태로 쌀 농가의 최소한의 소득안정을 심각하게 위협받는 가운데 즉각적인 추가 시장격리와 가격안정 대책을 마련하라는 요구가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의원은 13일 전남·전북 의원들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을 통해 "먼저 시행된 27만톤에 대한 시장격리는 추진 시점과 가격결정 방식의 문제로 쌀 가격 폭락 사태 해소에 어떠한 도움도 주지 못했다"며 정부에 이같이 촉구했다.

제기된 요구 사항은 ▲농정현실에 대한 정부의 반성과 근본적 인식전환 ▲당면한 쌀값 문제 해소를 위한 추가 시장격리 즉각 시행 ▲요건



충족시 시장격리 조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 ▲쌀 품목에 대한 생산비 보장 법제화 ▲자연재해 농산물 생산 감소 피해에 대한 국가보상을 의무화 하는 농업재해대책법 개정 등이다.

서 의원은 "생산이 늘어도 줄어도 농민들만 고통받는 참혹한 농업현실에 대한 정부의 반성과 인식의 대전환이 없다면 농어촌 소멸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다"고 근본적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서울=강병은 기자

## 지자체-민간-공공기관, 전남 사회문제 함께 푼다

지역문제해결플랫폼 본격 활동

전남도는 민간과 지자체, 공공기관이 한데 힘을 모아 지역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전남 지역문제해결플랫폼'이 본격적으로 활동에 들어갔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지역의 어려움은 지자체가 주도해 예산 투입 위주로 해결했다. 민간주도 협의체인 '전남 지역문제해결플랫폼'은 공공기관, 기업 등의 자원을 연계해 민·관 협업 방식으로 문제

를 해결한다.

전남도는 지난 4월부터 제안과제 공모, 권역별 사업설명회, 찾아가는 원탁회의를 추진해 40여 개의 과제를 발굴했다. 여기서 전문가 컨설팅, 발표심사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실행의제 20개를 최종 선정했다.

전남의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전략의제로는 ▲RE100 시민클럽 ▲커피박 친환경 재자원화 사업 고도화 ▲정소년 탄소제로카페 '방·탄' 운영 ▲플라스틱과 일회용품 없는 자유로운 목

포 '프리하당' 만들기 ▲어르신 생활안전 키트 설치 등 5개 의제를 선정했다.

일반의제로는 ▲다문화가정 2세 통상전문가 양성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사이영콘서트 ▲공공기관 불용용품 재활용 사업 ▲취약계층 컴퓨터 수리단 운영 ▲시각예술을 통한 노인 마음 치료 등 15개 의제를 확정했다.

실행의제는 의제실행팀과 협업기관이 의제 실행 계획을 함께 세우고 오는 11월까지 협업해 추진한다. /길용현 기자

M 전남매일 | 제11회 학교폭력예방 연중캠페인 |

전라남도교육청 Jeollanamdo Office of Education

네모난 교실은 잊어라!



### 전남형 그린스마트미래학교

5개년 175개교, 1조3천억 투자

- 교육과정과 연계하는 다양한 공간혁신
- 미래형 교수학습을 위한 스마트교실
- 환경생태교육을 고려한 그린학교
-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학교복합화